

국가회계 재지토계

ISSN 2635-7119

2022년 가을호
Vol. 32



국가회계 동향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단 운영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재정통계 동향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22~'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센터동향
제3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온라인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튜브 채널 생중계)

CONTENTS

2022년 가을호

Vol. 32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재지토계

VOL. 32

계간 국가회계재정통계 2022년 가을호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편집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문창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부소장
 한소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윤성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전화 044-414-2265(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
발행일 2022년 9월 30일
제작처 경성문화사

국가회계 동향

- 04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단 운영
- 06 제31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 08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우발부채 인식 개선」
간담회 결과보고
- 12 「2022 알기 쉬운 국가회계」 발간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14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 15 「2022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 16 2022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
- 18 2022회계연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
(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

재정통계 동향

- 22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22~'26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제출
- 30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 32 2021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 분석



공익법인회계 동향

44 2022년 공익법인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오피니언

62 회계 전문가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국가회계
(한중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67 독립성을 위협하는 공공부문 회계기준위원회
폐지 결정(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센터 동향

48 제3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온라인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튜브 채널 생중계)

51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교재 개발 최종보고회

52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실시

54 2022년 제2회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56 TDB-모잠비크 사절단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방문

58 「2022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 제2~5차 월례회의



공지사항

71 뉴스레터 구독 안내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
재지통계



국가회계 동향



-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단 운영
- 제31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우발부채 인식 개선」 간담회 결과보고
- 『2022 알기 쉬운 국가회계』 발간

01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단 운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단 3차 회의와 4차 회의를 각각 8월 11일과 9월 1일에 개최하였다.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단(이하 '자문단')은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국가회계기준 및 국가회계예규의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국가회계 프로젝트의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3월 자문단의 2022년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의 국가회계 프로젝트 추진 과제로 '현금흐름표 신설'과 '연금 회계처리 개선'을 선정하였다. '현금흐름표 신설' 과제는 국가 재정활동의 모습을 현금흐름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결산보고서에 현금흐름표를 새롭게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연금 회계처리 개선'은 사회보장급여 및 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등 국제적인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국가회계처리지침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과제이다.

서울역 4층의 KTX1 회의실에서 열린 자문단 3차 회의에서는 현금흐름표 신설 과제가 논의되었으며, 추진 과제별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 과제	논의 사항
	<p>예산결산 기준 현금흐름표 작성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1) 국고금 회계 현금흐름표 반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실체의 현금흐름 표시는 국고이전지출과 국고수입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민간 현금흐름표와의 비교, 국가통합 등 범용성 측면에서는 운영활동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함
현금흐름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2) 국유재산관리기금 및 부서간 간접원가 현금흐름표 반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서간 간접원가는 현금흐름이 나타나는 회계의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우세하게 논의 • (안건3) 예산결산 활용 현금흐름표와의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완전한 정보임을 감안한다면 명칭을 예산흐름표 등 타 명칭으로 달리하여 2025년 이후 산출될 현금흐름표와의 차이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서울 지방조달청 소회의실 1003호에서 열린 자문단 4차 회의에서는 2차 회의에 이어 사학연금의 사회보장급여 분류 논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최옥금 박사)과 사학연금공단(주효찬 박사)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각 연금제도의 성격 및 급여 구성항목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추진 과제	논의 사항
	<p>사학연금의 사회보장급여 분류의 적정성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공적연금제도 개괄 및 국민연금 급여의 산정체계 등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연금의 유형과 분류 방식 - 국민연금제도 포함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성 - 국민연금제도 운영 현황 및 급여산정 요소 분석 • (사학연금) 사학연금제도의 성격 및 급여 구성항목별 성격 등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연금제도의 시행 배경 및 공무원연금과의 관계 - 사학연금제도 운영 현황 및 변천 과정 - 사학연금급여의 구성 요소별 분석(사회보장적 성격 포함 여부)

센터는 금년 중 총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현금흐름표 및 연금 회계처리 과제에 관한 쟁점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두 과제 모두 추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3년의 프로젝트 과제에 추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02 제31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의결기구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 8월 5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추진방안」과 「현금흐름표 도입 방안」 등 2개 안건을 보고하였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향후 시범 작성 연구용역을 거쳐 최종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표 1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상정 안건

구분	안건	논의 결과
보고안건 제1호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추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결산 강화) 재정상태표 분류체계 개편 및 간소화 · 재정운영표 분야별·성질별 개편, 주식체계 개편 등 · (결산개요) 부총리·감사원장 메시지 도입 및 재무결산 정보 확대 	원안대로 의결
보고안건 제2호 「현금흐름표 도입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전체의 현금흐름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고, 재정활동(정부운영·투자·재무활동)별 구체적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현금흐름표 도입 ·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직접법 방식의 현금흐름표를 채택하여 도입 	원안대로 의결

이번 제31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장 최상대(기획재정부 제2차관), 정부위원 정희갑(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임기근(예산총괄심의관), 남우점(감사원 결산담당관), 민간위원 김봉환(서울대), 김선미(전남대), 김완희(가천대), 박경진(명지대), 송승아(서울여대), 유승원(경철대), 정도진(중앙대) 등 총 11명(민간위원은 가나다 순)이다.

가. (보고안건 제1호)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추진 방안

국가결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 가능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 결산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재무재표를 전면 개편하고, 결산개요의 결산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첫째, 재정상태표 분류체계 개편 및 간소화로 구분 실익이 없는 단·장기 분류기준을 없애고 자산·부채 분류체계를 간소화 하여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재정상태표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재정상태표 분석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부채 계정을 각각 금융·비금융자산, 차입·충당부채 및 기타부채로 묶어주는 중간단계 구분 기준을 신설한다.

둘째, 재정운영표를 분야별·성질별로 개편하는 방안으로 부처별 원가를 예산 16대 분야별로 집계하는 「분야별 재정운영표」, 수익·비용의 세부 구성 내역을 보여줄 수 있는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주 재무제표에 포함하여 재정운영표의 활용 가능성을 개선한다.

셋째, 재무제표의 주석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보완정보인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를 주석으로 통합 단일화한다.

넷째, 결산서의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부총리 메시지와 감사원장 메시지 및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개요에 추가하는 방안이다.

나. (보고안건 제2호) 현금흐름표 도입 방안

현금흐름표 작성 시 국가 전체 현금흐름을 재정활동(정부운영, 투자, 재무)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정활동별 현금의 조달원천과 사용결과 집계를 통해 현금흐름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고, 추세분석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현금흐름표는 운영활동을 작성하는 방식에서 재정운영표상 수익·비용에서 현금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발생주의 거래를 제거하는 간접법과 현금수반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를 직접 집계하는 직접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직접법이 간접법보다 이해하기 쉽고, IPSAS(국제공공부회계기준)도 공공부문에서는 직접법 작성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직접법 작성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03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우발부채 인식 개선」 간담회 결과보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재정위험의 잠재적인 요소인 국가의 우발부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우발부채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총 3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가. 제1차 간담회 “우발부채 공시 현황 및 분류체계 개선” (발표자: 정성호)

제1차 간담회는 2022년 5월 3일(화) 오전 10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별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정성호 연구위원(한국재정정보원), 최연식 교수(경희대), 한승엽 교수(홍익대)가 전문가로 참석하였다.

주요 발표내용 우발부채 관리의 중요성은 최근 국제기준의 재정통계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즉, 우발부채는 미래의 다양한 의제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 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 및 재정위기관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우발부채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우발부채 현황을 파악하고 우발부채의 개

념과 용어의 사용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우발부채 분류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분류체계로 정립하고, 이를 통해 우발부채 용어 개념을 명확히 하고 GFSM 2014에 근거한 명시적·암묵적 우발부채 분류(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토론내용 정부재정통계(GFS) 산출로 통일되고 있다는 발표문과 관련하여 발생주의 도입 국가 전체가 회계기반 결산보고서와 GFS를 병행하여 발표하고 있고 단일화된 국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IPSAS(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는 주요국의 정부 회계기준, GFS를 조화시키는 방향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가장 많은 합치를 이룬 국가는 호주에 해당한다. 또한, 발표문의 GFSM 2014에 기반한 우발부채 분류(안)은 대표적인 퇴직급여충당부채인 ‘공무원연금충당부채’를 우발부채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분류체계 시 연구진의 해석 오류로 판단되며, GFSM 2014에서도 퇴직급여부채와 보증·보험충당부채는 우발부채로 분류하지 않고 충당부채로 분류하고 있다. 우발부채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충당부채로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하며, IPSAS 등에서도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하되 동시에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내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나. 제2차 간담회 “영국 우발부채 관리 모범사례에 대한 분석” (발표자: 한소영)

제2차 간담회는 2022년 6월 10일(금) 오전 10시 서울 지방조달청 1003호에서 개최되었다. 최연식 교수(경희대), 한승엽 교수(홍익대), 조형태 교수(홍익대)가 전문가로 참여하였다.

주요 발표내용 영국은 재무부 산하에 ‘우발부채 승인체계(Contingent Liability Approval Framework)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위한 우발부채 관리를 체계화하고 있다. ‘우발부채 승인체계’는 ① 정책 개발 담당자가 해당 부처 재무팀과 협의하여 우발부채 발생가능성을 판단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발부채를 재분류하고, ② 재무부는 담당자 등 부처에 체크리스트 작성을 요구하여 최소 5일의 평가기간을 거쳐 승인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③ 재무부 승인이 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회에 통보하고, ④ 최종적으로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에 통합하여 보고한다.

주요 토론내용 영국 재무부 사정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발부채 승인체계 도입 목적을 두 가지 목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표면적으로는 장기 재정건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둘째, 실무적으로는 주무부처 견제를 강력히 하기 위한 툴(tool)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발부채 승인체계를 운영하는 주무부처의 권한 등 실질적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우발부채'라는 용어 사용으로 승인체계가 회계적인 요소로 보일 수 있으나 정책사업별 장기추계와 일맥상통해 보이며, 재정추계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등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다. 제3차 간담회 “지방의 우발부채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자: 한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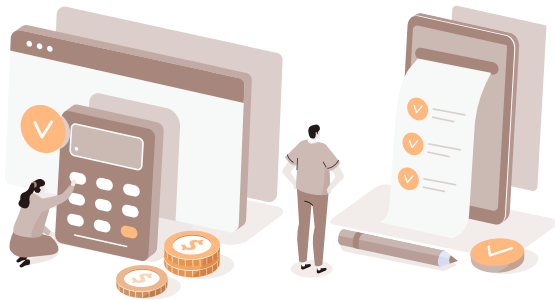
제3차 간담회는 2022년 7월 5일(화) 오후 2시 서울 지방조달청 1003호에서 개최되었다. 한재명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최연식 교수(경희대), 한승엽 교수(홍익대), 조형태 교수(홍익대), 문창오 부소장 등이 참석하였다.

주요 발표내용 지방 우발부채는 계류중인소송사건,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의무부담, 미실현 채무부담행위, 수익형민자사업(BTO) 재정지원 협약으로 구분된다. 통합부채 포괄범위상 우발부채는 2018년 기준 8조 1,519억원으로 자치단체가 전체의 81.1%를 차지하며, 재정관리 측면에서 결산보고서, 채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관리계획으로 관리 및 공시한다. 다만, 지방의 우발부채는 관리 대상의 이질성과 중복성, 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계 관리의 부족, 채무전환율의 획일성 등의 문제가 있어 GFSM에 근거한 재분류(안)를 제안한다. 또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액' 산정 등 차등 반영을 제시하여 유형별 적정 채무전환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주요 토론내용 '지방채발행 총액 한도제' 우발채무 산식 대신 우발부채를 반영하여 보다 포괄적인 산식 도출이 가능해 보이며, 지방 우발채무의 현실화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우발부채의 현실화를 도출한다면 우발부채 관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치단체의 주석사항은 국가 결산보고서와는 다르게 표준화가 잘 되어 있으며, 그 외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통해 통합부채를 작성하며 우발부채 항목도 자치단체 자료를 합산하여 통계자료를 만드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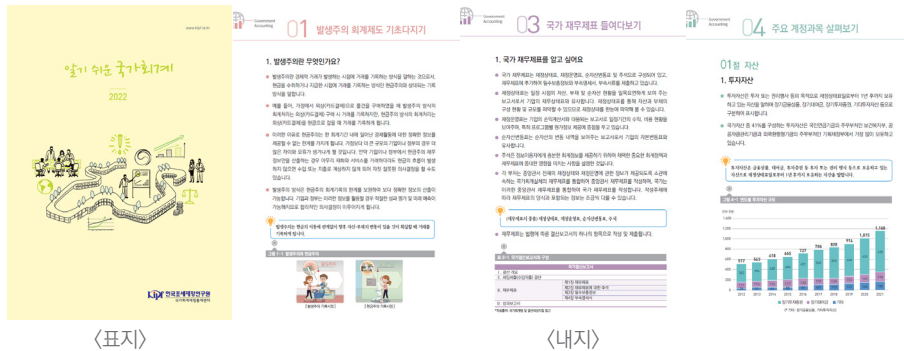


우발부채 관련 제3차 전문가 간담회(7.5., 서울 지방조달청 1003호)



04 『2022 알기 쉬운 국가회계』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2016년에 『알기 쉬운 국가회계』를 최초 발간한 이후 세부사항을 업데이트하여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알기 쉬운 국가회계』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국가회계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국가회계 교육자료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지>

<내지>

또한 『알기 쉬운 국가회계』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다지기, 국가회계제도 이해하기, 국가 재무제표 들여다보기, 주요 계정과목 살펴보기, 국가 재무제표 ‘더’ 들여다보기 등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국가회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별첨에는 2021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와 국가회계 실체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에 발간되는 『알기 쉬운 국가회계』에는 국가재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 자산과 부채, 재정운영 등의 재무정보와 이러한 재무정보가 산출되는 과정을 실었다. 특히 국가회계의 발생주의 도입 이후 10여 년간에 걸친 변화를 담고 있어 우리나라 국가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정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알기 쉬운 국가회계』가 국가회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책자는 2022년 10월에 배포될 예정이며, 온라인 파일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 『2022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 2022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
- 2022회계연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

01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함께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중간점검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6개 항목(전기오류수정손익 적정성, 지출금반납금의 잡이익 계상 오류, 자산 취득금액의 비용처리 오류, 내부거래 제거, 건설증인자산 적정성, 계정과목 선택 오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며, 중간점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월 12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기획재정부의 국가회계 동향 및 중간점검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중간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에 대한 설명 후에는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각 부처 담당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를 고취시킬 예정이다.

각 부처 결산담당자는 설명회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기금별로 6개 항목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보고서를 11월 1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점검보고서를 취합·분석하여 부처별 점검 실적을 확인하고, 오류 조치율이 전년도 실적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자체보고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02 『2022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 및 한국재정정보원과 함께 『2022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을 발간한다. 이번 책자는 2021년에 발간했던 『2021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에 감사원 지적사항, 『국가회계편람』 개정사항 및 차세대 디브레인 시스템 화면 등을 새로이 반영하며 이용자의 관점에서 좀 더 알기 쉽게 다듬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결산담당자용’은 한 권으로, ‘업무담당자용’은 ‘수입·지출’과 ‘국유재산·물품’ 두 권으로 나누어 발간한다.

결산담당자용은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와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 및 ‘결산업무 단계별 오류사례’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에서는 과거 10년간(2012~2021년) 감사원 지적사례를 분석하여 유형별, 중앙관서별로 통계자료를 제시하였다.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빈번히 발생한 지적사례 20개를 연례적 지적사례로 선정하여 각 사례별로 감사원 지적 발생 원인과 점검 및 조치 방안을 서술하였다. 2021회계연도에 발생한 감사원 지적건수의 95%가 연례적 지적사례에 해당하므로, 결산담당자가 이를 활용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한다면 감사원 지적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결산업무 단계별 오류사례’에서는 수정 전 시산표 마감 전부터 결산서 발행까지 결산업무 단계별로 발생하는 오류 유형 및 오류 정정방법 등을 제시하여 결산담당자가 업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업무담당자용의 ‘수입·지출’과 ‘국유재산·물품’은 업무담당자가 디브레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시킨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및 오류정정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서술하여, 업무담당자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제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s://gafsc.kipf.re.kr>)나 디브레인 게시판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03 2022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지난 3분기 동안 국가회계 전문교육 제2~9차를 개최하였다. 올해는 집합교육을 기본으로 전국 7개 주요 도시(서울(2회), 광주, 대전, 제주, 부산, 대구, 세종(2회))에서 9회차의 과정을 진행하며, 추가적으로 각 과정당 1차수를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병행 운영하여 더 많은 교육생들이 교육장소와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하였다.

각 과정은 차수별로 국가회계이론과정 2일, 국가회계실무과정 1일 등 총 3일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국가회계이론과정 1일차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심재영 명예교수를 시작으로 강원대학교의 정광화 교수, 순천대학교의 엄기중 교수가 차수별로 '회계원리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기초'에 대해서 국가회계를 처음 접하는 대상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이어서 진회계법인의 이재혁 회계사와 한길회계법인의 김상노 회계사가 '국가회계제도의 주요 체계'와 '발생주의 국가회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2일차에는 이정회계법인의 허웅 회계사가 '세업세출거래와 복식부기, 결산조정과 발생주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2일간의 전체 교육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종합사례연습'을 진행하며 수강생들의 이해도를 향상시켰다.

3일차인 국가회계실무과정의 오전 시간은 '수입·지출'(제1, 2, 4, 5, 6, 7, 8, 10차)과 '국유·물품'(제3, 9차)으로 구분하여 각 담당자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오류사례를 미리 점검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센터 회계사들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마지막 과정은 대성삼경회계법인의 모완수 회계사가 '국가재무제표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회계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그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는 강의로 전체 교육이 마무리되었다.



국가회계이론 교육생 수강 화면, 3차시(7.6., 대전 DCC)



04 2022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 (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2회계연도 국가재무결산을 앞두고 오는 10월에 중앙부처 재무결산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무결산실무 과정’을 교육한다.

본 과정은 재무결산 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업무 수행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 참석자는 본 교육을 통해 올해 국가결산의 방향과 주요 오류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등을 학습하게 된다. 교육 1일차에는 ‘① 재무결산의 이해 ②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③ 감사원 지적사례’를, 2일차에는 ‘① 내부거래제거 실무 ② 결산조정분개 ③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 강사로는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본 센터 결산교육팀 연구진이 참여한다. 결산교육팀은 국가결산 업무와 국가회계교육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2018년도에 신설된 조직으로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회계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회계이론 과정의 중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도 실시한다. 해당 과정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국가회계이론을 사전에 수강하고 해당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올해는 집합교육 방식과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방식을 병행하여 과정을 구성하였다. 재무결산실무는 2개 차수가 비대면과 집합교육 방식으로 각 2일간,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은 1차수가 비대면 방식으로 1일간 진행된다.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교육 과정들은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www.kipf.re.kr/edu/)에서 신청할 수 있다.

표 1 재무결산실무 과정 개요

지역	일정	시간	교육방식/장소	정원
무관	10. 20.(목) ~ 10. 21.(금)	10:00 ~ 17:30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100명
세종	10. 27.(목) ~ 10. 28.(금)	10:00 ~ 17:3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00명

표 2 재무결산실무 과정 커리큘럼

일자	교육과목	시간	주요 내용
	재무결산의 이해	1.5	1. 국가회계의 의의와 도입과정
			2. 국가회계 관련 법령
			3.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4.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1일차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2.0	1.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2. 국가회계편람 수정사항 3. 재무정보 조회 및 점검 방법 4. 수정 전 시산표 마감 전 유의사항
	감사원 지적사례	2.5	감사원 지적사례
2일차	내부거래실무	1.5	1. 내부거래의 의의
			2. 내부거래 제거방식
			3. 결산담당자 유의사항 및 처리방법
2일차	결산조정분개	2.0	1. 국가회계 결산조정분개의 이해
			2. 결산조정분개 오류사례
	결산보고서 작성	2.5	1. 결산작성지침 개요
2. 결산보고서 생성			
3. 결산보고서 발행			

표 3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 개요

지역	일정	시간	교육방식	정원
무관	10. 13.(목)	10:00 ~ 17:00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100명

표 4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 커리큘럼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1일차	국가회계정보와 결산보고서	1.0	1.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2. 정보로서의 국가결산보고서의 이해
	프로그램세출과 프로그램 원가, 그리고 재정운영표의 해석	3.0	1. 국가회계에서 원가계산의 의미 2. 프로그램세출 정보 3. 프로그램세출과 프로그램 원가의 관계 4. 프로그램 원가정보의 특성 및 활용방안 5. 재정운영표의 이해 6. 종합사례
	자산, 부채, 그리고 재정상태표의 해석	2.0	1. 재정상태표 개념과 의의 2. 자산구성: 금융자산과 서비스자산 3. 부채구성: 금융부채와 총당부채





재정통계 동향



-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22~'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 2021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 분석

01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22~'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가. 「2023년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는 2022년 8월 30일(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2023년 예산안은 새 정부가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국정기조를 충실히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어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건전재정기조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민간역량 활용 및 공공부문 효율화 등)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절감재원은 국정과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대비 투자 등의 핵심 정책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1) 재정 총량

2023년 예산안 기준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주요 세목의 세입기반 확충으로 전년 대비 57.1조원(16.6%) 증가하고,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15.3조원(7.3%) 증가하여 총수입은 전년 대비 72.4조원(13.1%) 증가한 625.9조원으로 전망된다.

총지출 중 의무지출은 고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필수소요 확대로 38.6조원(12.7%) 증가한 반면, 재량지출은 코로나19 백신 도입,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용자 등 확대된 한시소요 축소·폐지 등으로 7.2조원(2.4%) 감소하여 총지출은 전년 대비 31.4조원(5.2%) 증가한 639.0조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Delta 0.6\%$ 로 균형에 가깝게 개선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Delta 2.6\%$ 로 전년 대비 1.8%p 개선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는 49.8%로 전년 대비 $\Delta 0.2\%$ p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Delta 3\%$ 이내)을 준수하는 수준으로 중기 재정 총량을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하여 건전재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표 1 2023년 재정운용 모습

(단위: 조원, %, %p)

구분	2022년 ¹⁾ (A)	2023년 ¹⁾ (B)	증감	
			(B-A)	%
◇ 총수입	553.6	625.9	72.4	13.1
국세수입	343.4	400.5	57.1	16.6
국세외수입	210.2	225.5	15.3	7.3
◇ 총지출	607.7	639.0	31.4	5.2
의무지출	303.2	341.8	38.6	12.7
재량지출	304.5	297.3	$\Delta 7.2$	$\Delta 2.4$
◇ 통합재정수지	$\Delta 54.1$	$\Delta 13.1$	41.0	
(GDP 대비 %)	($\Delta 2.5$)	($\Delta 0.6$)	(1.9%p)	
◇ 관리재정수지	$\Delta 94.1$	$\Delta 58.2$	35.9	
(GDP 대비 %)	($\Delta 4.4$)	($\Delta 2.6$)	(1.8%p)	
◇ 국가채무	1,064.4	1,134.8	70.4	
(GDP 대비 %)	(50.0)	(49.8)	($\Delta 0.2\%$ p)	

주: 1) 2022년은 본예산, 2023년은 예산안 기준

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안」 중 2023년 예산안 전체 모습을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의무·재량지출 추가하여 작성. 의무·재량지출은 기획재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중 '재정지출' 참조

2) 분야별 자원배분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안전·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를 3대 중점 투자방향으로 하여 분야별로 자원배분을 하였다.

분야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국방 분야에서는 병 봉급 등 인상(82만→130만원), 첨단 전력 증강 관련 투자 확대를 위해 2022년 본예산 대비 4.6%가 증가하고,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위해 4.1%가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감축 지원 강화, 녹색금융 공급 확대,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홍수·가뭄 예방 투자 확대 등을 위해 3.9%가 증가하고, R&D 분야에서는 7대 핵심 전략기술 분야 등의 투자 확대를 위해 3%가 증가할 전망이다.

교육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각각 14.2%, 13.9% 증가하는데 이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부세 22.5조원 증가에 기인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부세를 제외할 경우 교육 분야의 경우 1.3%가 감소하고,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경우 10.3%가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반도체, 원전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 등을 확대한 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한시지원을 종료하여 18%가 감소하고, SOC 분야에서는 그동안의 지출확대를 감안한 투자적정화, 지방이양 등 반영으로 10.2%가 감소할 전망이다.

표 2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

(단위: 조원, %)

구분	2022년(A)		2023년 정부안(B)		증감(B-A)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증감률
◆ 총지출	607.7	100.0	639.0	100.0	31.4	5.2
(지방교부세·금 제외)					(8.9)	(1.5)
1. 보건·복지·고용	217.7	35.8	226.6	35.5	8.9	4.1
2. 교육	84.2	13.9	96.1	15.0	12.0	1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	(19.1)	(3.1)	(18.9)	(3.0)	(△0.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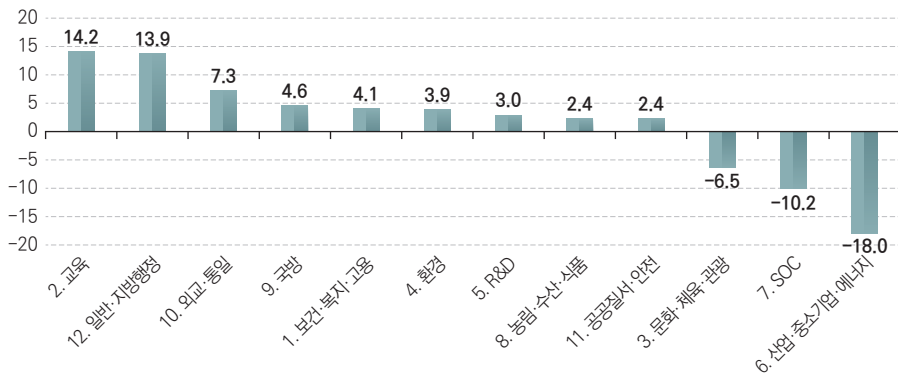
표 2 의 계속

구분	2022년(A)		2023년 정부안(B)		증감(B-A)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증감률
3. 문화·체육·관광	9.1	1.5	8.5	1.3	△0.6	△6.5
4. 환경	11.9	2.0	12.4	1.9	0.5	3.9
5. R&D	29.8	4.9	30.7	4.8	0.9	3.0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3	5.2	25.7	4.0	△5.6	△18.0
7. SOC	28.0	4.6	25.1	3.9	△2.8	△10.2
8. 농림·수산·식품	23.7	3.9	24.2	3.8	0.6	2.4
9. 국방	54.6	9.0	57.1	8.9	2.5	4.6
10. 외교·통일	6.0	1.0	6.4	1.0	0.4	7.3
11. 공공질서·안전	22.3	3.7	22.9	3.6	0.5	2.4
12. 일반·지방행정	98.1	16.1	111.7	17.5	13.6	13.9
(지방교부세 제외)	(33.0)	(5.4)	(36.4)	(5.7)	(3.4)	(10.3)

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안」 중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을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비중 추가 및 아래 [그림 1]의 그래프 작성

그림 1 분야별 자원배분 증감률

(단위: %)



나. 「'22~'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기획재정부는 2022년 8월 30일(화)에 「'22~'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에 대한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운용계획으로 재정의 역할과 함께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1) 「'22~'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재정수입은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이 예상되어 2022년 553.6조원(본예산)에서 2026년 715.2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될 전망이다.

재정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지출 감소 요인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잠재성장률 재도약을 위한 투자 등 지출 증가 요인이 상존하여, 2022년 607.7조원(본예산)에서 2026년 728.6조원으로 연평균 4.6% 증가될 전망이다.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 GDP 대비 $\Delta 2.5\%$ (본예산)에서 2026년 $\Delta 0.5\%$ 수준으로 적자폭이 축소되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22년 $\Delta 4.4\%$ (본예산)에서 2026년 $\Delta 2.2\%$ 수준으로 적자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2026년까지 GDP 대비 5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22~'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총량은 다음과 같다.

표 3 '22~'26년 중기 재정 총량

(단위: 조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본예산	추경				
재정수입	553.6	609.1	625.9	655.7	685.6	715.2
재정지출	607.7	679.5	639.0	669.7	699.2	728.6
통합재정수지	$\Delta 54.1$	$\Delta 70.4$	$\Delta 13.1$	$\Delta 14.0$	$\Delta 13.7$	$\Delta 13.4$
(GDP 대비, %)	($\Delta 2.5$)	($\Delta 3.3$)	($\Delta 0.6$)	($\Delta 0.6$)	($\Delta 0.6$)	($\Delta 0.5$)
관리재정수지	$\Delta 94.1$	$\Delta 110.8$	$\Delta 58.2$	$\Delta 58.6$	$\Delta 57.4$	$\Delta 56.6$
(GDP 대비, %)	($\Delta 4.4$)	($\Delta 5.1$)	($\Delta 2.6$)	($\Delta 2.5$)	($\Delta 2.3$)	($\Delta 2.2$)
국가채무	1,064.4	1,068.8	1,134.8	1,201.2	1,271.9	1,343.9
(GDP 대비, %)	(50.0)	(49.7)	(49.8)	(50.6)	(51.4)	(52.2)

출처: 기획재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 8. 편집

2)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원인 분석

재정수입은 세수여건 개선 등에 따라 당초 '21~'25년 계획상 예측 경로(연평균 6.4%) 대비 증가가 전망(연평균 6.6%)된다.

재정지출은 '22~'26년 기간 중 연평균 4.6%(2022년 본예산 기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계획에서 제시한 5.5%(2021년 본예산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세수여건 개선과 지출 증가속도 억제 등을 통해 전년 계획 대비 '22~'26년 계획상 재정지표가 개선될 전망이다. 재정여건 변동에 따른 중기 재정 총량의 변화는 <표 4>와 같으며, '22~'26년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는 전년 계획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 및 국가채무 증가폭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중기 재정 총량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구분	2021년	2022년 ³⁾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 증가율
재정 수입	'21~'25년 계획 ¹⁾	482.6	548.8	570.2	593.9	618.5	-	6.4
	(증가율)	(0.2)	(13.7)	(3.9)	(4.2)	(4.1)	-	-
	'22~'26년 계획 ²⁾	-	553.6	625.9	655.7	685.6	715.2	6.6
	(증가율)	-	(14.7)	(13.1)	(4.8)	(4.6)	(4.3)	-
재정 지출	'21~'25년 계획 ¹⁾	558.0	604.4	634.7	663.2	691.1	-	5.5
	(증가율)	(8.9)	(8.3)	(5.0)	(4.5)	(4.2)	-	-
	'22~'26년 계획 ²⁾	-	607.7	639.0	669.7	699.2	728.6	4.6
	(증가율)	-	(8.9)	(5.2)	(4.8)	(4.4)	(4.2)	-
통합 재정 수지	'21~'25년 계획 ¹⁾	△75.4	△55.6	△64.5	△69.4	△72.6	-	△0.9
	(GDP 대비)	(△3.7)	(△2.6)	(△2.9)	(△3.0)	(△3.0)	-	-
	'22~'26년 계획 ³⁾	-	△70.4	△13.1	△14.0	△13.7	△13.4	△33.9
	(GDP 대비)	-	(△3.3)	(△0.6)	(△0.6)	(△0.6)	(△0.5)	-
관리 재정 수지	'21~'25년 계획 ¹⁾	△112.5	△94.7	△104.7	△108.4	△109.2	-	△0.7
	(GDP 대비)	(△5.6)	(△4.4)	(△4.7)	(△4.7)	(△4.6)	-	-
	'22~'26년 계획 ³⁾	-	△110.8	△58.2	△58.6	△57.4	△56.6	△15.5
	(GDP 대비)	-	(△5.1)	(△2.6)	(△2.5)	(△2.3)	(△2.2)	-

표 4 의 계속

	구분	2021년	2022년 ³⁾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 증가율
국가 채무	'21~'25년 계획 ¹⁾	956.0	1,068.3	1,175.4	1,291.5	1,408.5	-	10.2
	(GDP 대비)	(47.3)	(50.2)	(53.1)	(56.1)	(58.8)	-	-
	'22~'26년 계획 ²⁾	-	1,068.8	1,134.8	1,201.2	1,271.9	1,343.9	5.9
	(GDP 대비)	-	(49.7)	(49.8)	(50.6)	(51.4)	(52.2)	-

주: 1) '21~'25년 계획: (2021년) 본예산(2022년) 정부안

2) '22~'26년 계획: (2022년) 국회 확정 기준(연평균 증가율),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2022년 2차 추경 대비 증가율: 재정수입 4.1%, 국세수입 3.8%)

3) 재정수입, 재정지출: 본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추경 기준

출처: 기획재정부, 「'22~'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 8. 편집

3) 「'22~'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22~'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 대내·외 경제 여건 및 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방향뿐만 아니라 12대 분야별 투자 방향과 재정 혁신 방향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정혁신의 방향을 크게 다음의 여섯 가지 방법으로 계획 중이다.

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반 마련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방향으로 재정 준칙을 재설계 및 법제화하며,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민부담의 적정수준 관리를 위해 수입·지출 부문의 선제적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② 성역 없는 지출 효율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경제운용 방향 뒷받침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23년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4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인구·경제·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재구조 개편도 병행할 계획이다.

③ 재정제도 개혁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양성 투자소요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경제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④ 수입기반 확충 및 자원조달 다변화

세입기반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와 공공기관 자산정비 등을 통한 자원조달의 다각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⑤ 재정성과 관리체계 강화

성과 기반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성과평가 표준화, 평가결과의 예산환류 강화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고도화를 추진하고, 국가결산의 유용성을 높이고 결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추진을 계획 중이다.

⑥ 데이터·AI 기반 과학적 재정운용

중앙(dBrain+), 지방(e호조), 지방교육(e-에듀파인) 및 공공기관의 분산된 광범위한 재정정보를 통합·공유하는 재정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과 다양한 정책지표(8천여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AI 기반 정책성과관리 체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02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가.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보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31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립한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하였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작성 대상은 총 39개 기관이며,¹⁾ 총자산은 '22~'26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150.6조원)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기반시설 등 SOC 자산 증가와 주택금융공사를 중심으로 한 안심전환대출 등의 정책금융 실행에 따른 대출채권 증가에 기인한다. 한편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22년 187.6% 수준에서 재정건전화 등을 통해 2026년에는 169.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5 자산, 부채, 부채비율 실적(2021년) 및 전망(2022~2026년)

(단위: 조원, %)

구분		2021년 (실적)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2~ '26년 중장기	자산	890.9	970.1	1,020.5	1,056.7	1,088.0	1,120.7
	부채	550.6	632.8	664.3	677.1	692.4	704.6
	부채비율(%)	161.8	187.6	186.5	178.4	175.0	16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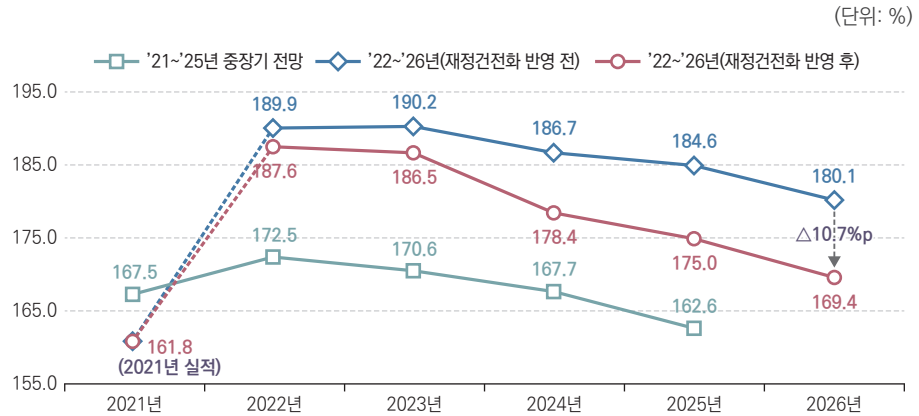
나. 지난해 계획 대비 비교 및 재정건전화 방안

지난해('21~'25년) 계획과 비교하여 볼 때 올해('22~'26년) 계획상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은 모두 증가하였다. 부채규모 증가 원인은 에너지 전환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의 신규 정책 도입, 연료가격 급등에 의한 사업비 증가이다. 부채비율의 경우 당기 순손실 확대에 따른 자본 감소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

1) 자산 2조원 이상 혹은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대상임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 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화 방안 시행을 통해 부채비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 2 부채비율 전망치 비교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22. 8. 31.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03 2021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 분석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산을 수행하고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게 된다. 2021회계연도 결산 대상 준정부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총 92개 기관이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2년 8월 국회에 제출된 2021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서 내용을 바탕으로 결산결과를 분석하였다.

2021회계연도 준정부기관의 자산은 290.5조원(전년 대비 14.4조원, 5.2% ↑), 부채는 242.3조원(전년 대비 8.2조원, 3.5% ↑)이고, 영업수익은 213.4조원(전년 대비 31.8조원, 17.5% ↑), 당기순이익은 6.5조원(전년 대비 3.0조원, 85.2% ↑)을 기록하였다.

가. 자산과 부채

준정부기관의 자산 및 부채의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준정부기관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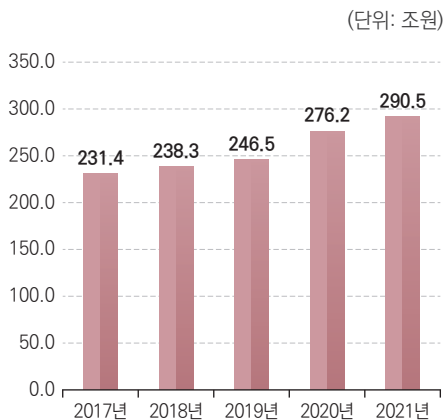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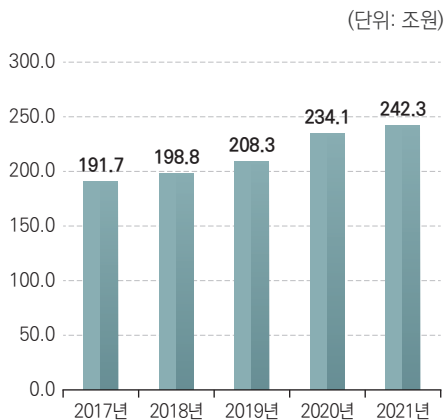


그림 4 준정부기관 부채



주: 준정부기관 대상 변동 및 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재무제표가 재작성되어 전년도에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와 일부 차이가 발생함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준정부기관의 자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대출채권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2021회계연도 준정부기관 총자산의 55.6%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차지하고 있고, 총자산 변동액(14.4조원) 중 56.0%(8.0조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산 변동에 따른다.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및 중소기업창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 확대에 따른 공제부금 원리금 증가 등으로 상승 추세이다.

나. 영업수익과 당기순이익

준정부기관의 영업수익 및 당기순이익의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준정부기관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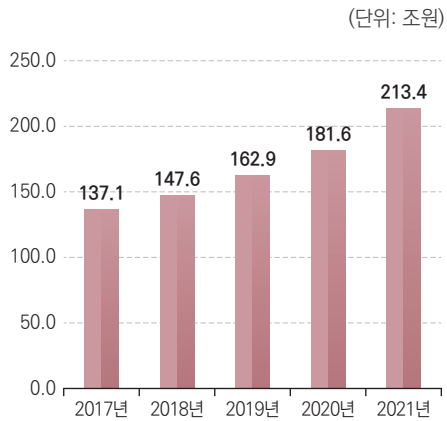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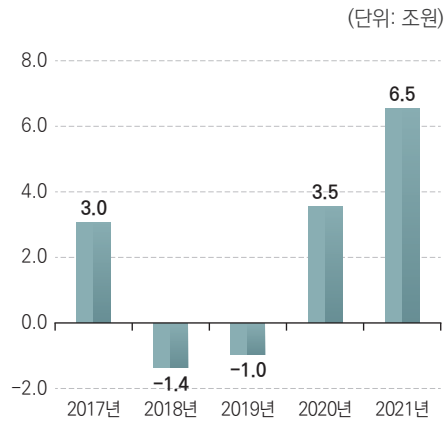


그림 6 준정부기관 당기순이익



주: 준정부기관 대상 변동 및 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재무제표가 재작성되어 전년도에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와 일부 차이가 발생함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준정부기관의 영업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직장가입자 수 증가 및 보수월액 상승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2017년 53.7조원, 2021년 77.4조원으로 4년 동안 23.7조원 증가), 국민연금수급자 수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의 출연금수익도 증가하였다(2017년 19.6조원, 2021년 29.8조원으로 4년 동안 10.1조원 증가). 특히 코로나19 영향으

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이 증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수탁사업수익이 크게 증가하였다(2017년 0.3조원, 2021년 16.7조원으로 4년 동안 16.4조원 증가).

준정부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2019년 적자에서 2020년 흑자로 전환하였고, 2021년 6.5조원을 기록하며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당기순이익 변동의 주된 원인은 코로나19에 따라 개인 위생이 강화되면서 병원방문 횟수가 크게 감소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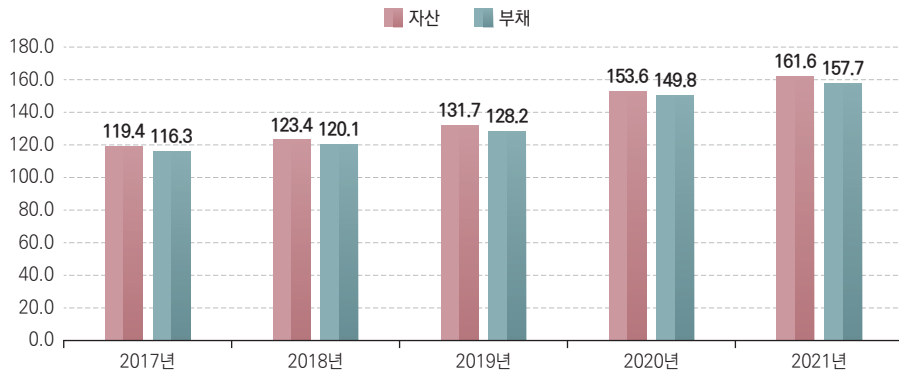
다. 주요 준정부기관 증감 분석

1) 한국주택금융공사

2021회계연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산은 161.6조원, 부채는 157.7조원으로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55.6%, 총부채 중 65.1%를 차지하고 있고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 7 자산 · 부채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3.6조원, 2021년 +3.8조원으로 코로나19 이후 +7.4조원 증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급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론 공급 등으로 자산과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다.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인해 대출채권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발행으로 유동화부채가 증가하였다.

그림 8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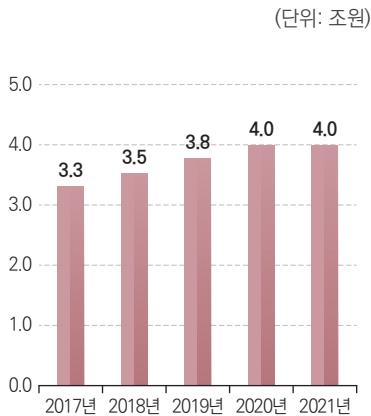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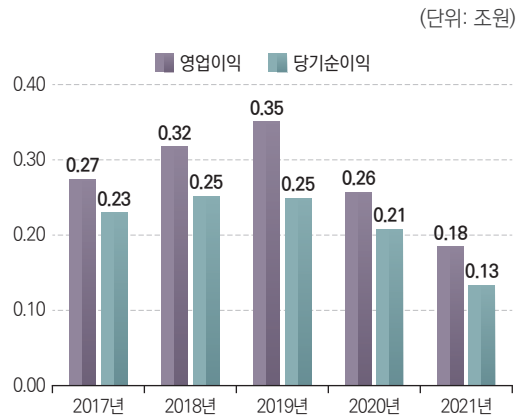


그림 9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대출채권 이자 및 수수료수익이 늘어 영업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유동화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비용 또한 동시에 늘어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대출채권 증가로 순이자와 수수료수익이 증가하였지만 파생상품 관련 순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당기순이익은 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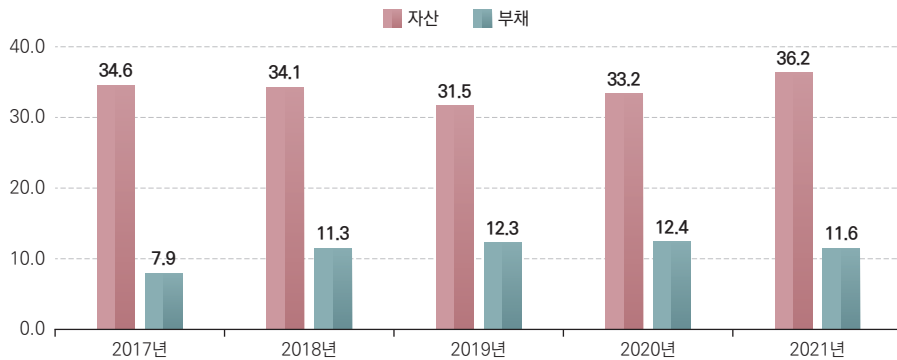


2)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회계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은 36.2조원, 부채는 11.6조원으로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12.5%, 총부채 중 4.8%를 차지하고 있고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 10 자산·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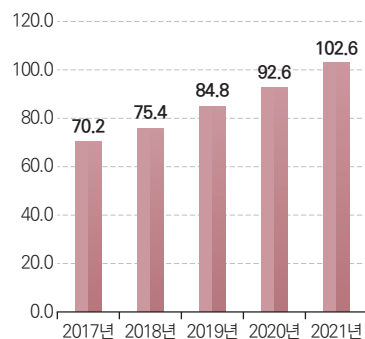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급여비 증가로 자산은 감소하고, 보험급여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부채는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이후 보험료 수입 확대와 여유자금 운용으로 자산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건강보험급여비 조기지급에 따른 보험급여충당부채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그림 11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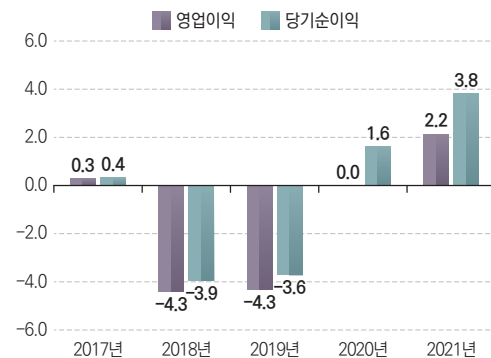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그림 12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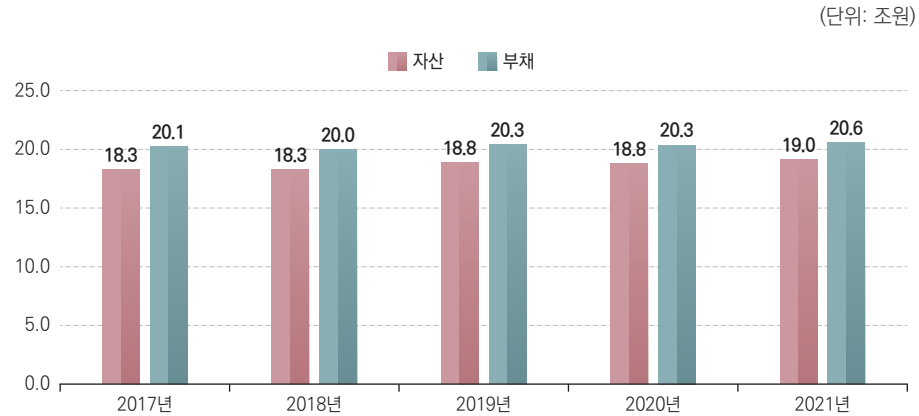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수 증가 및 보수월액 상승 등으로 보험료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수가 인상 및 의료보장 확대에 따라 영업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영업비용 증가율이 영업수익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위생관리가 강화되면서 2020년에는 영업손실이 영업이익으로 전환되었으며, 2021년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다.

3) 국가철도공단

2021회계연도 국가철도공단의 자산은 19.0조원, 부채는 20.6조원으로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6.6%, 총부채 중 8.5%를 차지하고 있고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 13 자산 · 부채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2021회계연도 기준으로 비유동자산이 자산의 95.3%를 차지하며, 대부분 유형자산(건축물 및 건설중인자산 등)과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 등 용역운영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 및 부채는 고속철도 자체 사업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의 경우 자체보유 현금 증가 등으로 전기 대비 자산이 증가하였다.

그림 14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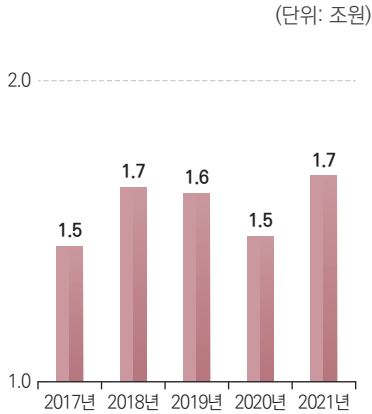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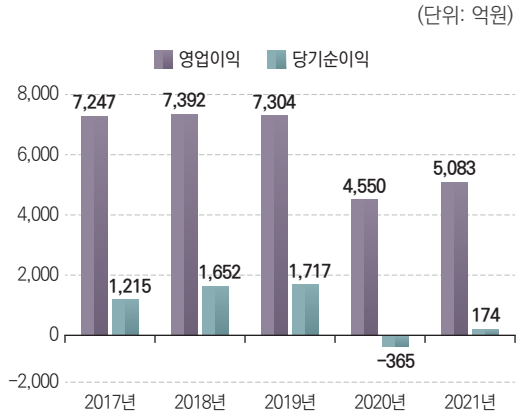


그림 15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국가철도공단은 고속철도 건설비용의 50~65%를 공단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고, 철도 운영사(코레일, SR(주))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로 징수하여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이다. 영업수익은 선로사용료 및 임대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속철도 선로사용료(선로사용료에서 유지·보수비용을 차감)가 고속철도 자체 사업비 조달을 위한 사채이자에 미달하여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 이후 철도운영자 경쟁체제 도입(SR 운영) 및 수서발 고속철도의 이용객 증가로 인해 선로사용료가 증가로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선로사용료가 크게 감소하면서 2020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을 일부 회복하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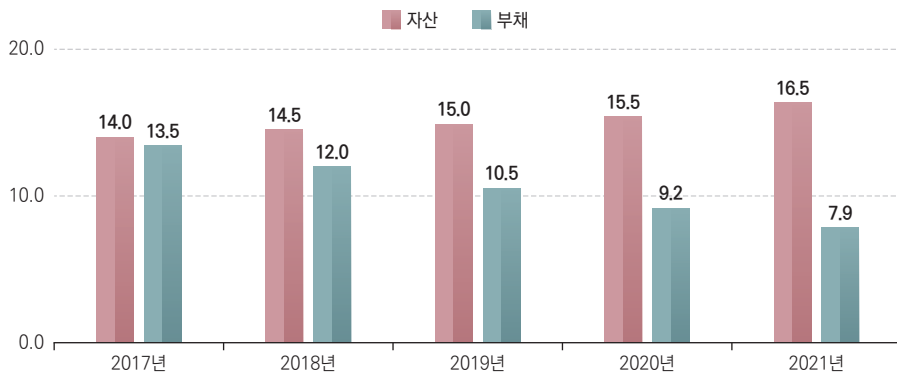


4) 예금보험공사

2021회계연도 예금보험공사의 자산은 16.5조원, 부채는 7.9조원으로 준정부기관 총 자산 중 5.7%, 총부채 중 3.3%를 차지하고 있고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 16 자산·부채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발생한 순자산 부족 상황이 2017년부터 해소되었으며 이후 보험료수입 등을 활용하여 운용자산을 늘리고 발행채권을 상환하여 부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17 영업수익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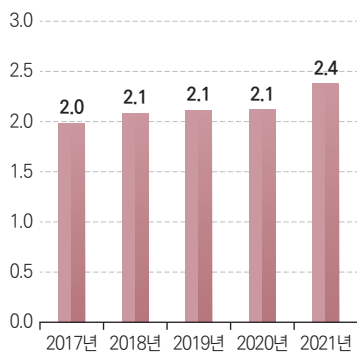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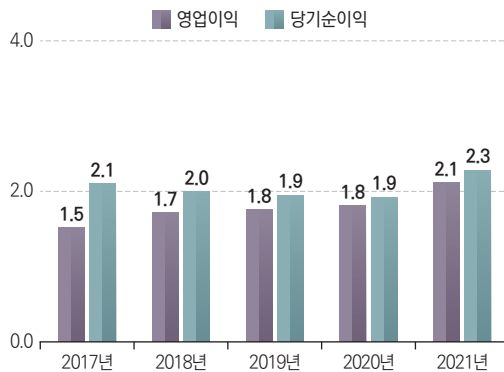


그림 18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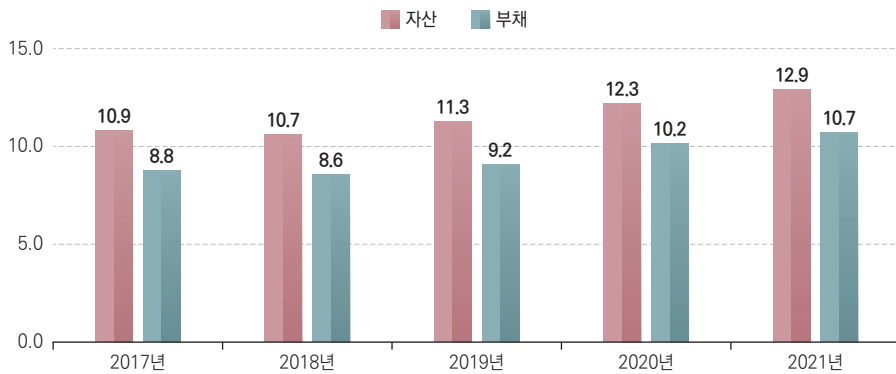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매년 예금 잔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수령하는데 부보예금 평균잔액 증가로 인한 보험료수익 증가 등으로 영업수익은 증가 추세이며, 지속적인 금융부채 상환으로 이자비용이 감소하여 영업이익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5) 한국농어촌공사

2021회계연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산은 12.9조원, 부채는 10.7조원으로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4.4%, 총부채 중 4.4%를 차지하고 있고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 19 자산 · 부채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진흥청의 종전부동산 개발사업 및 농지은행 사업 확대에 의해 자산이 증가 추세이고, 이에 따른 사업비 조달을 위한 사채 발행으로 부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20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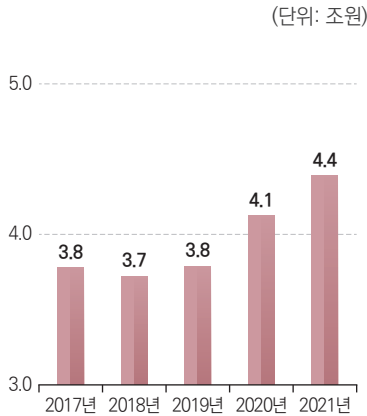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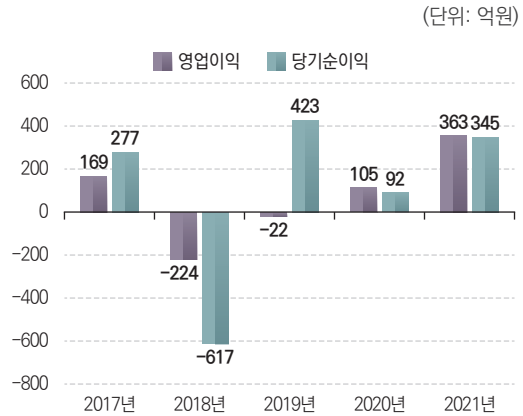


그림 21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한국농어촌공사는 스마트팜혁신밸리사업 및 어촌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영업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에는 영업이익 감소 및 법인세추납액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크게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 용수관리사업, 생산기반정비사업 등의 매출 증가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스마트팜혁신밸리사업 등 매출 증가로 영업이익은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유형자산처분이익 기저효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매출 증가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소송충당부채 환입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53억원 증가하였다.

국가회계
재지통계



공익법인회계 동향



• 2022년 공익법인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01 2022년 공익법인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는 지난 7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시정요구 기관의 합리화 및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등을 개정하였다.

(1)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

공익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서류 공시 의무가 있으며, 결산서류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다. 개편안에서는 공시·시정요구기관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추가 되어 실질적인 공익법인의 각종 신고의무 감독주체가 공시·시정요구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보고서 공시 의무 • (대상) ① 총 자산가액 5억원 또는 ②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3억원 이상 • (공시 서류) 재무상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 등 • (공시 방법)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 • (공시·시정 요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장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시정 요구기관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출처: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2.

(2)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

공익법인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2022년부터 시행되는데, 개편안에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정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다. 지정된 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 (대상)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지난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아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 ②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 (지정 방법) 4개 연도 자유선임 후 2개 연도에 대해 감사인 지정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이행 가산세) -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받은 재산가액) × 0.07%

출처: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2.



국가회계
재지통계



센터 동향



- 제3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온라인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튜브 채널 생중계)
-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교육 교재 개발 최종보고회
-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실시
- 2022년 제2회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TDB-모잠비크 사절단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방문
- 「2022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 제2~5차 월례회의

제3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온라인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튜브 채널 생중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11월 3일에 제3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본 심포지엄은 국내외 공공부문회계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실질적 활용과 제도개선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제2회 국제심포지엄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한 재정위험 관리”를 다루면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우발부채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진행된다. 제3회 국제심포지엄은 “우발부채 관리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의 우발부채 관리현황을 짚어보고 우발부채 관리의 모범사례국인 영국 사례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표 1 2020~2021년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개최 실적

구분	성과
제1회(2020. 11. 3) “국가별 공적연금 회계의 현황과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HAW MoU 체결, 대내외 112명 참여 • 참여국: 4개국, IPSASB (한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총 4개국)
제2회(2021. 11. 2~3) “재정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역할” 1일차 :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재정위험 관리 2일차 : 발생주의 재무정보 기반 자산·부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일간 개최, 대내외 동시 접속 80여명 • 공식 홈페이지 개설 • 참여국: 7개국, IPSASB, OECD (한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스위스, 프랑스 총 7개국)
제3회(2022. 11. 3.) “우발부채 관리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회계학회 MoU 체결 • 참여국: 2개국(한국, 영국), OECD, IPSASB

우발부채란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결과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불확실한 의무를 말하며 우발부채는 미래에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재정지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재정위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보이지 않는 비용인 ‘우발부채’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어 통제와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감사원, 국회 등 외부에서 우발부채에 대한 관리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국가결산보고서상 주석에 공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첫 번째 발표로 한국 정부의 우발부채 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해 짚어본다. 최연식 교수의 발표로 국가결산보고서 주석으로 공시된 한국정부의 우발부채 규모, 항목 등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는 만지 칼리(Manj Kalar) 대표가 수행하며 우발부채 관리의 모범 사례로 확인된 영국의 사례를 발표한다. 영국은 2011년도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 발간 이후 현저히 증가하는 영국 공공부문의 총당부채 및 우발부채를 파악하게 되고, 이후 감사원 및 예산책임청 등에서 이에 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에 영국은 우발부채 관리 개선을 위해 2017년 ‘우발부채 승인체계(Contingent Liability Approval Framework)’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관리 체계를 통해 관리 중에 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박성진 소장,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이은경 과장, 감사원(BAD)의 최성훈 부감사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Ivor Beazlely 팀장,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Ross Smith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재정투명성과, 책임성, 및 위험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우발부채 관리방안 모색에 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국제심포지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표 2 제3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개최계획

2022.11.03 (목) 14:00 ~ 16:50
YouTube 라이브 스트리밍

2022 제3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KIPF

International Symposium

우발부채 관리개선 방안

코로나19 후기와 세계적 경기침체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한편, 보편적 금융 위기는 우발부채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발부채의 한계는 적절히 비호환 불충분치입니다. 일부 현상만을 경우 예대금 지급지출을 초과하는 만큼 사전에 파악하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영국은 새로운 정책적인 시, 우발부채 발생여부를 검토 후 사업용 증대는 우발부채 승인제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심포지엄은 영국 우발부채 승인제에 도입으로 인한 실용적 효과를 확인하고, 한국의 우발부채의 관리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

2022 제3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KIPF

International Symposium

프로그램		개회	
14:00~14:30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축사	유승원	한국회계학회 회장
	업무협약 체결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회계학회
주제발표			
14:30~15:00	발표 1	한국의 우발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최연식 경희대학교 교수	
15:00~15:30	발표 2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체계 효과분석 Manj Katar, Katar Consulting 대표	
15:30~15:40	휴식		
종합토론			
15:40~16:40	회장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토론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이윤경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최성훈	강서원 공공감사지원국 부감리관
		Ivor Beazley	OECD 예산공공지출국 팀장
		Ross Smith	IPSASS 국장
16:40~16:50	폐회		

제3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은 공식 홈페이지(<https://gafsc-seminar.kr/main>)에서 사전등록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어 및 영어로 동시통역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교재 개발 최종보고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2년 하반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운영을 위해 한국세무학회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교재 개발」 최종보고회를 2022년 8월 22일(월)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연구진인 전규안 교수(숭실대), 선우희연 교수(세종대), 한승엽 교수(홍익대)가 연구 내용에 대해 최종보고하였으며, 외부 토론자인 이지훈 회계사(진일)와 엄기중 교수(순천대), 센터 실무진, 연구진의 토론이 이어졌다. 교재의 전반적인 난이도 조절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담당자가 실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연구진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교재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교재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에 바로 사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회계담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도록 계속 발전시킬 예정이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회계교육 교재 개발 최종 보고회(8.22.,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실시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이 9월 22~23일 양일간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이번 제1차 교육에는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약 100여명의 교육생이 참석하였다.

본 교육과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회계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교육 대상자인 회계 관련 직원들의 수준을 고려한 회계이론과 실무 내용을 다룬다. 사전에 진행한 주제별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 위주의 회계이론과 실무 교육을 병행하여 회계 담당자들이 교육 내용을 업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은 하루에 7시간씩(9:30~17:30) 이틀 동안 진행되었다.

1일차에는 숭실대학교 전규안 교수와 홍익대학교 한승엽 교수가 강의를 맡아 회계 순환과정 및 수익인식, 국공채 등의 회계이론에 대해 설명했다. 2일차에는 세종대학교 선우희연 교수, 진일 회계법인 이지훈 회계사가 유·무형자산, 정부보조금 등에 대해 강의하였고, 이어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최지영 회계사가 결산서 작성방법에 대한 실무를 강의하며 수강생들의 회계 지식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9.22~23.,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총 4회차로 구성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은 10월과 11월에 세 차례의 교육이 더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올해 교육 대상자의 교육 참여도를 파악하여 차년도 교육 운영시 교육 횟수 증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교육일정

차수	지역	일정	시간	장소	인원	신청기한
1차	서울	9.22.(목)~9.23.(금)	09:30~17:3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100명	~9.19.(월)
2차	세종	10.13.(목)~10.14.(금)	09:30~17:3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00명	~10.7.(금)
3차	서울	10.27.(목)~10.28.(금)	09:30~17:30	섬유센터 컨퍼런스홀	130명	~10.21.(금)
4차	서울	11.17.(목)~11.18.(금)	09:30~17:30	섬유센터 컨퍼런스홀	130명	~11.11.(금)

○ 교육 커리큘럼

일자	시간	내용	강사	
			성명	소속
1일차	09:00~09:30	0.5h	참가자 등록(출석부 서명)	
	09:30~12:00	2.5h	회계순환과정 및 재무제표 표시	전규안 / 송실대학교
	12:00~13:00	1.0h	점심(출석부 서명)	
	13:00~14:00	1.0h	수익	한승엽 / 홍익대학교
	14:00~15:30	1.5h	채권, 총당부채와 우발부채	한승엽 / 홍익대학교
	15:30~17:30	2.0h	금융자산, 특수한 자본투자	한승엽 / 홍익대학교
	17:30~	0.5h	종료(출석부 서명)	
2일차	09:00 ~ 09:30	0.5h	참가자 등록(출석부 서명)	
	09:30 ~ 12:00	2.5h	유무형자산 및 리스	선우희연 / 세종대학교
	12:00 ~ 13:00	1.0h	점심(출석부 서명)	
	13:00 ~ 14:00	1.0h	종업원급여	선우희연 / 세종대학교
	14:00 ~ 15:00	1.0h	정부보조금	이지훈 / 진일회계법인
	15:00 ~ 16:30	1.5h	외부회계감사 주요 오류사례	
	16:30 ~ 17:30	1.0h	결산서 작성방법	최지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7:30 ~	0.5h	종료(출석부 서명)	



2022년 제2회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8월 9일에 센터의 2022년 사업추진 실적과, 2021년도 연구기관 평가의 센터 사업에 대한 평가내용을 보고하고자 2022년 제2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센터의 정책사업과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센터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이번 자체평가위원회는 대면 및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위원장인 심재영 교수(한국방송통신대)의 주재로 박성환 교수(한밭대), 박세환 상임위원(한국회계기준원), 지현미 교수(계명대), 최원석 교수(서울시립대), 박노욱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참여하였다.

보고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22년 사업추진 실적안건에서는 센터에서 진행 중인 2022년 사업 현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예산 확보, 인력 공백 등 센터의 대응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 단기/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유연히 대응

나. 사업을 진행할 때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수립하고 이를 사업 수행 및 보고 시에 활용

또한 2021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안건에서는 센터에서 수립한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기관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센터에서 수립한 평가지표의 평가논리와 근거를 점검하여 설득력 있는 지표체계 구성이 필요

나. 기계적인 정량지표를 설정하기보다 정량화시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 하더라도 정성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센터 이해관계자들의 자료 이용 경험에 관한 지표들이 중요함

다. 연구기관 평가자의 입장에서 지표 구분이 명확하도록 평가지표 중 정성지표와 정량지표의 비율을 나타내는 방안 제시

센터는 자체평가위원회에 취합된 의견을 참고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며, 추후 연구기관평가 및 정책기여도 평가에 대비하여 지표 설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2년 제2회 자체평가위원회(8. 9.,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중회의실)



TDB-모잠비크 사절단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방문

2022년 8월 10일(수) TDB-모잠비크 사절단이 정책 실무자 연수의 일환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센터)를 방문하였다. 사절단은 모잠비크 재무부 부채관리국(Debt Management Office) 공무원 6인과 무역개발은행(TDB) 관계자 2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방문에서는 센터 박성진 소장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개에 이어 박윤진 재정통계팀장이 한국부채통계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국의 국가부채 관리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TDB-모잠비크 사절단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방문(8.10.,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중회의실)

주요 발표내용

한국은 GFSM2001과 PSDS에 따른 재정통계를 산출 및 발표하고 있다. IMF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현금주의 재정통계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 2011회계연도부터는 GFSM 2001로 재정통계를 전면 개편하여 발생주의로 전환하였으며,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로 작성범위를 확대하여 산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는 중앙·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부채통계를 산출하여 공표하고 있다.

한국의 부채통계 체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D1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중앙재정 및 지방재정의 채무를 합산한 현금주의 기준의 채무(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이다. D2 및 D3는 국제기준에 따라 산출한 발생주의 부채로 D2는 일반정부 기준이며, D3는 일반정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개념이다.

부채통계는 부채를 다양한 방식으로 세분화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제고에 도움을 준다.

주요 질의 응답

○ 부채 관리 정책이 존재하는가?

- 현재 한국에 재정준칙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국가채무에 대한 전망 및 상환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암묵적 부채란 무엇인가?

- 국가가 공기업 부채 등에 대해 지급보증 시 발생하는 부채 등을 의미한다.

○ 정부 통계 산출을 위해 각 부처의 금융자산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데 모든 부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가?

- 한국의 경우 2009년부터 국가회계에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각 부처의 재무제표를 통해 자산 정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통계산출시 활용하고 있다.

○ PSDS에 따른 부채 산출의 경우 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데이터도 필요한데 자료 확보는 어떻게 하는가?

- 정부와 공공기관 모두 발생주의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 중이다. 따라서 각 기관의 정보는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통계 템플릿을 배포하여 각 기관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2022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 제2~5차 월례회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2022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중 정부회계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회계 전문가들이 각자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 및 활용성 제고에 관한 세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매월 1회 월례회의를 통해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정부회계 분과의 연구진은 김봉환 교수(서울대), 이정희 교수(서울시립대), 최연식 교수(경희대), 조형태 교수(홍익대), 김진욱 교수(건국대)로 구성되었다.

구분	연구주제	연구자
1	재정위험관리보고서 도입방안	김봉환(서울대)
2	발생주의에 기반한 국가채무지표 재설계	이정희(서울시립대)
3	정부회계 우발부채의 회계처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최연식(경희대)
4	정부의 복지부문 사업보고서 도입에 대한 검토	조형태(홍익대)
5	국가회계의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차이: 부처별 특성을 중심으로	김진욱(건국대)

제2차 월례회의는 2022년 7월 22일 17시 서울지방조달청 10층 소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재정위험관리보고서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김봉환 교수(서울대)가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고, 윤성일 교수(강원대)와 한종석 교수(아주대)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월례회의에서는 재정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확한 정보공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재정위험보고서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재정위험분석 대상, 보고서 발간주기 및 발간주체 등에 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3차 월례회의는 2022년 9월 2일 17시 서울지방조달청 10층 소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국민 삶의 질과 결산보고서 연계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조형태 교수(홍익대)가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최원석 교수(서울시립대)와 김선옥 박사(한국재정정보원)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월례회의에서는 뉴질랜드의 웰빙 관련 투자 보고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관련된 정보공시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결산보고서를 통해 제공되는 발생주의 회계정보와의 접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4~5차 월례회의는 2022년 9월 16일 15시부터 서울지방조달청 10층 중회의실에서 연달아 진행되었다. 4차 월례회의에서는 최연식 교수(경희대)가 ‘정부회계 우발부채의 회계처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로 연구내용을 발표하였으며, 토론자로는 윤성만 교수(서울과기대)와 한승엽 교수(홍익대)가 참석하였다. 월례회의에서는 향후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발부채에 대하여 정보공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해외 공시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우발부채 공시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발부채의 구체적인 공시 기준 설정, 잠재적 영향의 계량화, 효과적인 우발부채 관리체계 마련 등에 대하여 다양하게 논의하였다.

이어진 5차 월례회의에서는 김진욱 교수(건국대)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 개별 지방자치단체장이 불용액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라는 주제로 연구내용을 발표하였으며, 토론자로는 윤성만 교수(서울과기대)와 한승엽 교수(홍익대)가 참석하였다. 월례회의에서는 상위계층이론(Upper Echelons Theory)을 바탕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특성이 해당 지자체 예산의 불용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이질적 효과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2022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 제5차 월례회의(9.16., 서울지방조달청 10층 중회의실)





오피니언



- 회계 전문가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국가회계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독립성을 위협하는 공공부문 회계기준위원회 폐지 결정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회계 전문가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국가회계

한중수 교수(이화여자대학교/차기 한국회계학회 회장)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2009년 「국가회계법」의 시행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에는 현재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전신인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설립되었고, 2012년에는 국가결산보고서에 2011회계연도에 대한 국가재무제표가 국회에 최초로 제출되었다. 그 이후 2014년에는 『국가회계편람』을 발간하면서 국가회계기준의 체계가 정비되었다.

발생주의에 기반한 국가회계의 유용성

현금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예산회계에 발생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재무제표를 도입한 것은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예산회계에서는 법률 형식적 요건에 따라 국가의 채권·채무가 제시되는 반면, 국가재무제표상의 자산·부채·순자산에 관한 정보는 경제적 실질에 기반을 둔 재정상태를 제시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무분석 정보의 생산이 가능하다. 실제로 국가재무제

표의 도입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사회기반시설 등이 재무제표에 인식되고 향후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국가부채의 잠재적 심각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사업)별 재정운용의 효율성 평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원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중앙정부 각 소관별 정책사업에 대해 원가 집계 및 사업성과의 측정이 가능하다. 셋째, 발생주의 회계제도에서는 의사결정 시점에 의사결정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다. 이는 국가재무제표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을 증원시켰을 경우 현금주의에서는 파악되지 않는 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미래에 지불해야 하는 부채의 누적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다른 OECD 회원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국가 간의 비교 가능성이 가능해져, 타 국가 대비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국가회계

이러한 많은 장점에 큰 기대를 걸고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채택하여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국가재무제표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금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은 현금주의·단식부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를 통해 생성된 회계정보가 예산과정을 비롯한 재정 전반에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재무보고 개선 I 프로젝트와 재무보고 개선 II 프로젝트를 등을 통하여 결산보고서 체계를 정비하고 예산-결산 간 연계성을 보완하는 등, 국가회계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은 국가재무제표가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2012년 이후 계속 지적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행정안전부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폐지를 2022년 9월 확정하였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뿐 아니라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도 모두 폐지가 결정되어, 회계기준 관련 3개 위원회가 모두 폐지된다. 발생주의에 기반한 국가회계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

는 회계기준, 다양한 부처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및 보고양식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국가회계의 중요성을 행정부 자체가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국가재무제표는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많은 요소가 원인이자 개선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예를 들면, 국가회계기준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 재정비되어야 하며, 감사원의 결산검사가 회계감사 수준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결산감사 이외에 내부통제 감사로 확장되어야 하며, 국가재무제표에 의미를 부여하는 적절한 발생주의 재정지표를 더 많이 개발하여 성과평가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더 나아가 현금주의에서의 예산과 같이 예측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예측 재무제표와 결산 재무제표를 비교하는 차이 분석 등을 통하여 원인이 무엇인지, 정당한 것인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회계 전문가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국가회계

많은 원인이 지적되었지만, 저자는 국가재무제표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국가회계가 회계학자를 비롯하여 많은 회계 전문가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라고 생각한다. 발생주의에 기반한 재무제표는 기업회계에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발생주의 회계의 전문가는 기업회계의 전문가들이다. 이는 국가회계가 발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회계의 전문가가 국가회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유용한 활용방안과 개선방안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실상은 국가회계와 회계 전문가 사이는 괴리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회계학 분야에서의 국가회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회계에 대한 필요한 만큼의 활용방안과 개선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회계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을 살펴보자.

〈표 1〉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11개의 회계학 분야 등재 학술지에 발표된 국가회계 관련 논문의 수를 요약한 표이다. 〈표 1〉에 의하면 국가회계 관련 논문은 전체 논문의 경우 3.9%에 불과하다. 3년간 국가회계 관련 논문이 전혀 발표되지 않은 학술지는 3개, 1개의 논문만이 발표된 학술지는 5개나 된다. 국가회계 논문

총 39편 중 54%에 해당하는 논문이 『정부회계연구』라는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정부회계연구』는 국가·지방·공공회계에 특화된 학술지이므로 이런 결과는 당연하다. 그런데 다른 학술지를 보면 결과는 초라하다. 만일 정부회계학회지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10개 학술지에 발표된 최근 3년간의 논문 수는 16개밖에 되지 않는다.

표 1 회계학 분야 등재 학술지별 국가회계 관련 논문수(2019년~현재)

(단위: 편, %)

	학술지명	국가회계 논문수(A)	총논문수(B)	비율(A/B)
1	관리회계연구	1	46	2.17
2	국제회계연구	1	164	0.61
3	세무회계연구	1	86	1.16
4	세무와 회계저널	0	90	0.00
5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	46	2.17
6	정부회계연구	23	42	54.76
7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0	77	0.00
8	회계와 정책연구	0	99	0.00
9	회계학연구	1	128	0.78
10	회계정보연구	3	78	3.85
11	회계저널	8	144	5.56
	총계	39	1,000	3.90

〈표 2〉는 39개의 국가회계 관련 논문 저술에 참가한 저자의 수와 이들이 논문 저술에 참여한 횟수를 요약한 표이다. 먼저 국가회계 관련 논문 저술에 참가한 저자는 총 69명이다. 회계 관련 학회 중 가장 대표적인 학회인 한국회계학회의 총 등록인원은 약 1,800명이고, 이 중 대학교 교수는 약 950명이다. 이를 고려하면, 국가회계 관련 논문 저술에 참가한 저자는 전체 회원의 3.8%, 교수의 7.3%에 불과하다. 69명 중 2번 이상 논문 저술에 참여한 저자는 14명이고, 나머지 55명의 저자는 단 한 번 논문 저술에 참가하였다. 이는 국가회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계분야 연구자는 단 14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회계학 분야 등재 학술지에 발간된 논문 저술에 참여한 저자수와 참여 횟수(2019년~현재)

논문 참여 횟수	총 참여 저자수 (계: 69명)
1번	55명
2번	11명
3번	3명

맺음말

큰 기대를 걸고 시작한 발생주의에 기반한 국가재무제표는 시행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과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국가회계가 회계학자를 비롯하여 회계 전문가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이다.

기획재정부가 최종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우리나라의 국가자산과 국가부채는 각각 2,866.1조원과 2,195.3조원이다. 2021년 말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각각 4,153.6조원과 2,481.4조원이다. 이는 국가자산 및 국가부채가 상장기업의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업회계에 대한 연구만큼 많은 연구가 국가회계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표 1>과 <표 2>가 보여주듯이 기업회계에 비하여 국가회계에 대한 연구나 국가회계를 연구하는 회계학자의 숫자는 턱없이 적다.

발생주의에 기반한 재무제표는 기업회계에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발생주의 회계의 전문가는 기업회계의 전문가들이다. 이는 국가회계가 발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 전문가들에게 국가회계를 연구할 수 있는 풍성한 기회와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국가회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활용방안과 개선방안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이 제시한 방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새로운 연구가 충분히 그리고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선순환 과정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학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회계학자를 비롯한 우수한 회계 전문가가 행정가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터가 만들어져야 한다. 공동의 노력으로 발전하는 미래의 국가회계를 기대한다.

독립성을 위협하는 공공부문 회계기준위원회 폐지 결정

정도진 교수(중앙대학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얼마나 될까?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에 관심은 있을까? 최근 누구보다 이에 관심을 가졌을 분들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아닌가 싶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의원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재정정책 발언을 비판했다가 형사 고발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에 대해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이달 2일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관련 사건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초 안 의원이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로 D4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D4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안 의원은 D4 관련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2088년에는 무려 1경 7,000조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후 이 연구위원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D1, D2, D3는 국가부채 단위이지만, 안 의원이 언급한 D4는 존재하지 않는 안 의원이 만든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¹⁾ 이에 안 의원 측은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해당 유튜브 채널은 오히려 토론을 제안하면서 파장이 커졌고, 국민의당은 이 연구위원이 안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렇게 논쟁이 붙어질 만큼 국가부채가 정말 중요한가? 본인과 공동연구진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SSCI 저널에 발표한 최근 결과에 따르면,²⁾ 국가부채가 GDP 대비 1% 증가하면 국가신용등급은 약 0.04등급 하락하고 국채수익률은 약 0.03% 증가한다. 여기서 국채수익률의 증가는 국채상환위험의 증가를 의미한다. 즉, 국가부채가 커지면 국가신용등급은 확실히 낮아진다. 이로 인해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은 당연히 증가하고,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부도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참고로, 국가채무를 일으키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1% 증가하면 국가신용등급은 약 0.15등급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얼마나 될까? 2022년 4월 5일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³⁾ 2021년 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214.7조원(10.8%) 증가한 2,196.4조원에 달한다. 기업과 달리 국가의 경우 부채와 자산의 직접적인 비교는 해석에 한계가 있지만, 2021년 말 우리나라의 국가자산이 전년 대비 352.8조원(14.2%) 증가한 2,839.9조원이므로 국가부채는 국가자산의 약 77.3% 수준이다. 그런데 2021년 GDP 기준으로 국가부채가 약 10.4% 증가하였으므로, OECD 분석결과를 적용하면 2021년 국가부채의 증가는 국가신용등급을 전년보다 약 0.41등급 하락시킨다고 볼 수 있다.

국가부채 2,196.4조원 중 D1으로 불리는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120.6조원(14.2%) 증가한 967.2조원으로 국가부채의 44% 정도이다. 국가부채가 소위 발생주의라는 회계개념에 따라 국채나 차입금과 같은 확정부채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군인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를 포함한 규모라면, D1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

1) YTN, 「[팩트와이] 국가부채 'D4' 개념은 안철수가 만들어냈다?」, 2022. 8. 15. 9시 9분.

2) Do-Jin, Jung, Kim Jong-Hyun, and Chang Seok-Jin, "Does accrual-based government financial information serve as an indicator of fiscal risks?," *Public Money & Management, Taylor & Francis Journals*, 41(8), November 2021, pp. 594~603.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등 국무회의 심의 의결」, 2022. 4. 5.

부에 상환의무가 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된 채무를 의미한다. 국가부채가 아닌 D1의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국가자산의 약 34.1%로 국가부채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하며 OECD 분석결과를 적용한 국가신용등급의 하락도 약 0.23등급에 그친다. 한편, 국가부채 유형 중 D2(일반정부부채)와 D3(공공부문부채)의 2021년 말 금액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12월에 발표될 예정으로, 다만 2020년 D2와 D3는 각각 945.1조원과 1,280.0조원으로 D1의 111.6%와 151.2%에 달한다.

이렇게 국가부채의 정의에 따라 재정이사결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국가부채의 정의 등을 제정하는 국가회계기준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이에 국제회계기준의 두 중심축인 미국과 영국 등 선진자본국가들은 GASB(정부회계기준위원회)나 FRAB(재무보고자문위원회) 등 정부와 독립된 국가회계기준의 제정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다.

표 1 주요국의 국가회계기준 제정기구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국가회계기준 (주·지방정부)	국가회계기준	SFAAS (GAS)	FReM	AASB Standards	Public Sector Standards	PASA
국가회계기준 제정기구						
중앙정부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FASAB	FRAB	AASB	ASB	PSAB
지방정부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	GASB				

※ 회계기준과 제정기구는 약칭을 사용함

우리나라는 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각 위원회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국가회계기준 제정기구를 두고 독립성을 보완해 왔다. 그런데 지난 10월 7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⁴⁾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치된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정부는 회계 관련 3개 위원회를 모두 폐지하였다. 앞서 안 의원과 이 연구위원의 논쟁에서도 본 것처럼 국가부채의 정의에 따라 재정평가와 의사결정이 달라지듯이, 정부

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 (39%) 폐지·통합」, 2022. 9. 7.

정책이나 정치적 영향력에서 회계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국가 회계의 수치스런’ 결정이다. 관련 위원회가 활발히 개최되지 않아 폐지되는 것이라면 국가재정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폐지보다 오히려 적극적인 개최 노력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며, 최소한 3개 기준 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회계기준의 독립성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수록된 내용의 원문은 한국경제신문의 「[정도진의 숫자로 보는 세상] 나랏빛 꼼꼼히 따질 '회계기준 제정기구'는 있어야」, 2022.9.21.의 고정칼럼에 게재된 내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국가회계재정통계 구독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는 회계전문연구기관인 센터에서 발간하는 분기발간물로서 주요 내용으로 국가회계, 국가결산, 국가회계교육, 재정통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에 대한 동향 및 분석 자료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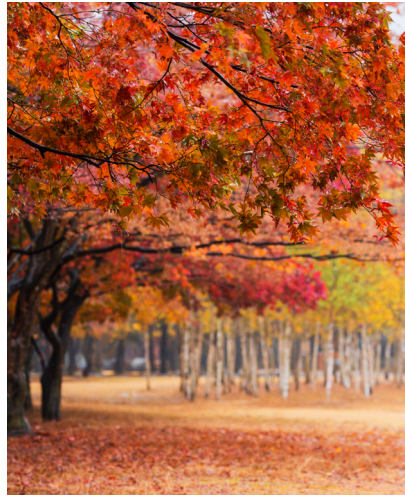
- 홈페이지 신청 <http://gafsc.kipf.re.kr>
- 이메일 신청 gafsc@kipf.re.kr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신 발간자료와 주요 발간자료 메뉴를 통해 연구보고서, 기타보고서, 브리프, 세미나자료 등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발간물 등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노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앞장섭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